



Occasional Paper Series

03-05

# 침체된 독일 · 유럽 경제가 주는 정책적 교훈과 시사

## Europe and Germany in Transition: Where Will the Economies Go?

---

**Hans Tietmeyer**

前 독일중앙은행 총재

*November 2003*

**세계경제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필자 약력

---

***Hans Tietmeyer***

前 독일중앙은행 총재

유럽공동체(EC) 경제위원장, EC 통화위원장, G10 중앙은행총재회의 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European Business School 총장으로 활동중임.

## 침체된 독일 · 유럽 경제가 주는 정책적 교훈과 시사\*

Hans Tietmeyer

9월에 발간된 IMF의 '세계경제전망' 최근호는 "2003년의 세계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와 같은 수준인 약 3%를 기록하고, 2004년에는 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은 "지난 4월이래 리스크(risk)는 감소해왔지만, 여전히 저변에 깔려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달러화의 환율문제와 국제유가에 관한 불확실성 외에도, 1990년대 말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주식시장 거품의 마이너스(-)적인 후유증에 관한 내용도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경제 전망치는 세계 각 지역에 대한 다양한 결과치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특히 아 · 태지역은 금년에 또다시 고도성장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나아가 2004년에는 더 높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저(低)성장이 예상되며,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킬 추가조치와 디플레이션의 종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그 동안의 미국 경제성장이 특별하고 일시적인 인센티브(incentive)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더라도, 금년 역시 미국경제가 세계경제 성장의 주된 엔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특별조세감면 혜택이나, 주택가격 상승과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들의 자산증식 효과, 대폭적인 군사비 지출 증가의 경우를 보면 정말 그러한데, 이러한 것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요소들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미국은 2004년에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견인차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성장동력으로부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게다가 중남미와 아시아뿐만 아니라, 특히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규모가 큰 미국경제의 성장이 내년도에도 절실히 필요한 형편이다.

현재의 유럽이 세계경제를 강력하게 주도할 역할을 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미 지난 20년 동안 유럽의 경제성장률은 미국보다 낮은 수준에서, 그리고 아 · 태지역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왔다. 최근 수년동안에는 오히려 그 격차가 더 커지기까지 한 상태이다. 오늘날 유럽의 저성장과 상대적 고(高)실업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

\* 이 글은 세계경제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가 2003년 11월 4일 공동개최한 특별강연회 녹취내용을 번역 ·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이 단일경제인 것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유럽에는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공동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유무역지대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구조나 실적 면에서는 그 격차가 여전히 크다. 이와 같은 격차는, 한편으로는 각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기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시행되어온 서로 다른 경제정책 때문이다.

가령, 소위 '체제전환국(countries in transition)' 이라고도 하는 대부분의 중·동부 유럽국가들은 지금 현재 서부 유럽보다도 훨씬 더 빠른 성장을 보이면서 따라잡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내년엔 유럽연합(EU)에 가입하게 될 10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때에 가면 유럽연합은 25개국으로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지금의 15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두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 그룹은 단일 화폐 및 통화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유로(euro)그룹' 12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이며, 다른 한 그룹은 아직까지도 유럽 경제통화동맹(EMU)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3개국(영국, 덴마크, 스웨덴)이 그것이다. 이 마지막 3개국의 유로그룹 참여 여부와 시기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이들 국가에 대한 지난 수년간의 경제성장 및 실업 수치와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이 3개국은 유로그룹보다 어느 정도 더 나은 실적을 이루어 왔으며 당분간은 이러한 현상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이 통화동맹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 및 실업 수치의 차이는 작년의 경우 유로그룹 내부에서도 나타났으며 지금도 현저하게 나타난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아일랜드 및 베네룩스 3국 등과 같이 따라잡기를 하고 있는 국가들은 보다 나은 실적을 이루어 왔다. 반면에 유럽대륙의 3대 경제대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지난 수년동안 성장을 멈추거나 저성장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실업률이 상승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전체 유로그룹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가까이되는 이 3개국의 상황이 그러한 것이다.

현재 12개 유로국가가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를 상회하며, 전세계 재화 및 용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30%가 넘는다. 이는 미국에 바로 뒤이은 규모로 유로지역은 이미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통화지역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제2위의 경제통화지역이 지난 수년동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도 안 되는 경제성장률을 보여 왔으며, 부정적인 전망에 의하면 이 지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9%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부진한 실적과 전망치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유로그룹 전체, 특히 그룹내의 3대 강국이 좋은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해답은 앵글로-색슨(Anglo-Saxon)계의 분석전문가들이나 평론가들이 가끔 주장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종종 유로지역의 통화정책이나 심지어 재정정책까지 비판하면서 유로지역의 정책이 충분히 성장지향적이지 못하

다고 언급하곤 한다. 즉, 그들은 명목금리를 현재의 2%보다 더 낮추고 동시에 재정확대정책을 실시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의 견해로는 그러한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 유로지역의 성장둔화는 경기순환 현상도 아니고 지나친 통화 및 재정긴축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다. 성장둔화와 실업증가의 실제 원인은 특히 유로지역 강대국에서 훨씬 더 뿌리가 깊다. 이에 대한 원인은 주로 구조적 현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적절한 구조적 정책결정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을 뿐이다. 과중한 공공부담 및 경직된 규정 체계를 바로잡고 개선하고자 하는 확신에 찬 노력만이 미래지향적인 정책 시각을 발전시킬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커다란 정치적 용기와 시간이 필요하다.

유로지역 국가들의 경우에는 향후 정치적 기본구도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단기적인 통화 및 경기부양 정책마저도 역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새로운 통화의 신뢰성을 훼손하기 쉬우며, 이미 과중한 상태인 해당 국가의 공공부채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에게 필요한 것은 누적된 구조적 문제와 적자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정책이다.

지난 10년간 일부 국가에서 나타난 중요한 구조적 문제들 중 몇 가지는 이미 점점 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에 대부분의 EU국가들은 자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을 개선할 수도 있었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의 성장과 고용을 이루는데 실패했다. 이러한 부진은 1980년대 하반기에 시작된 이른바 EU의 단일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당초 예상뿐만 아니라 과거 실적 및 최근 미국경제의 성과와 비교할 때 충격적이었다.

물론 현재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선진국들이 부진한 데에는 어느 정도 다른 이유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공통점들도 있다. 우선 노동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경직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규제와 유연성이 부족한 임금체계 때문이다. 또 공공복지가 너무 확대되어 적절한 재원조달이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역효과가 나는 인센티브를 수혜자들에게 주고 있는 경우도 흔히 있다.

특히 인구구조가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펀더멘탈(fundamental)의 개선 없이는 이들 국가의 복지시스템 대부분은 더 이상의 재원조달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공공복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거나, 아니면 공공부채, 사회보장부담금, 조세부담 등을 늘여야만 하는 처지이다.

유럽 안팎에서는 이와 같은 재정 및 노동시장 문제가 1999년의 화폐통합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도 가끔 있다. 하지만 이는 옳지 않다는 것이 본인의 견해이다. 비록 단일통화 창설과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에 의한 단일통화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화폐통합이 구조적인 문제들을 심화시키고 각국간의 격차를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지만, 유럽연합 내부의 경쟁력은 대폭 증가되었다.

최소한 지난 4년 동안은, 12개 회원국들 사이에는 모든 투자자들이 동일한 통화조건을 가짐으로써 환율리스크가 전혀 없었다. 그 대신, 지금은 다른 모든 경쟁요소들(규제나 조세부담, 노동비용과 같은)이 유로지역에서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앞서 말한 경쟁요소들이 이제 더 이상 서로 다른 통화조건이나 국제환율의 변동가능성으로 보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새로운 경쟁요소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독일 마르크화(deutsche mark: DM)가 국가화폐로 자리잡고 있을 때에는, 독일은 명목금리가 대부분의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지금은 단일통화정책으로 인해 모든 유로국가들의 명목금리가 같다. 다만 현재 독일의 실질금리가 대부분의 다른 유로국가들보다 높은 편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을 때문이다.

유로지역 내의 이와 같은 새로운 경쟁은 새로운 기회만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 역시 창출하였는데, 독일처럼 사회보장 및 공공복지 시스템이 크게 발달된 국가들에게는 특히 그러하다. 이 말은 어떠한 형태로든 화폐통합에서 창출되는 혜택에서 소외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지금 현재 유로지역 내에서는 환율 비용 및 리스크가 크게 감소되었고 소비자들도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자국 화폐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졌다는 의미이다. 단일통화정책이란 단일금리가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지금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화폐통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렸다. 본인도 개인적으로 1970년대부터 이 과정에 계속 참여해 왔는데, 처음에는 유럽경제통화동맹 창설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특별전문가그룹의 일원이었다. 통화동맹을 출범시키자는 합의는 오랜 준비기간과 함께 다소 심각했던 유럽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로부터 약 30년 후에야 이루어졌던 것이다.

출범 당시의 EMU는 일부 평론가들에게 ‘무모한 모험(‘An Awfully Big Adventure’, 1998. 4. 11일자 *Economist*)’으로 비추어졌다. 그들은 위험천만한 첫 발이라고 비평하였으며, 심지어 그 당시 밀턴 프리드먼(Milton Freedman)이나 마틴 펠드스타인(Martin Feldstein)과 같은 인사들은 EMU가 단기간 내에 와해될 것이라고까지 하였다. 그 이후 이러한 예측들이 보다 조심스러워지기는 하였지만, 본인은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비판적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본인은 여전히 유럽 전역에 걸친 공청회 등에서 EMU 내의 새로운 경쟁과 유연성 부족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EMU의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통화동맹 자체는 유럽을 위해 전반적으로 성공적이라는 것이 본인의 평가이다. 유럽 내의 통화안정성이 유지되었으며, 오히려 유로지역에서는 크게 개선되기까지 하였다. 유로지역에서는 종래의 환율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며, 따라서 위험분산 비용도 감소되었다. 특히 소비자들은 경쟁력과 가격투명성이 더욱 높아진 이웃국가들로 인해 혜택을 보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한 이득을 보고 있는 국가도 일부 있는데, 이전에는 환율평가절하 위기에 처해 국내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독일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과거 핵심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의 저금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된 국가가 그들이다. 따라잡기를 하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는 초기에 높은 인플레이션을 때문에 실질금리 하락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과도기적인 것으로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더욱 중요한 요소는 회원국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유연성 및 구조적 경직성의 격차이다. 그런데 지금 이 요소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필요한 구조개혁을 이루도록 하는 통화동맹의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으며, 이미 언급한 유럽대륙의 3대 강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앞서 말한 ‘이코노미스트’ 지의 1998년도 기사에서 예견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즉, “EMU의 커다란 잠재력은 오랫동안 지연된 구조개혁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 긴장을 야기하고, 나아가 유럽연합(EU) 및 단일통화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유로는 유로가 아닌 개혁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언젠가는 나타날 불가피한 추세이다. 화폐통합은 이러한 개혁들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화폐통합은 유럽에 유익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본인이 이미 그 이전부터 강조해온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동의한다는 말 외에는 더 이상 할말이 없다.

그러는 동안에, EU는 모든 유럽국가의 유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침내 깨닫게 되었으며, 작년에 EU 각국 정상들은 “리스본 어젠더 (Lisbon Agenda)”에 합의함으로써 10년 이내에 유럽 각국들을 미국처럼 역동적이고 유연하며 혁신적인 경제로 만들자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 성명서는 평범한 프로그램에 불과할 뿐이고, 이와 같은 성명서와 그 문구가 EU를 진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유럽, 특히 3대 강국이 필요한 것은 국가차원의 믿을 만한 구조개혁이다. 물론, 이러한 개혁은 유로지역과 유럽 전체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도 유로지역 GDP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경제는 이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지난 3년동안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유럽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금년에도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대략 0%가 될 가능성이 크며, 내년 역시 대부분의 경제예측가들은 1.5~2% 범위 이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유럽 각국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의 유럽 챔피언”인 독일경제가 지금 어려운 전환기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으로 독일은 여전히 가장 고도로 발달된 공산품 및 기계설비 부문의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 중 하나이며, 통일이후 수년이 지난 지금 독일의 대외수지는 다시 흑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동력과 신규투자 부족 뿐 아니라 소비수요 부족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지난 수년동안의 전반적

인 경제성장률은 현저하게 하락했으며, 기록 행진을 해오던 실업률은 이미 더욱 높아진 상태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독일경제의 취약점은 잘못 이해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는 독일이 과거의 능력이나 자원을 상실하였다거나, 유럽 내에서의 “챔피언 지위”를 영원히 잃었다는 것이 아니다. 1990년대의 일본 경제와 비교해 보면 독일은 1980년 말의 일본 경우와 비슷한 규모의 부동산 및 주식 거품을 겪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현재 독일경제가 취약해진 원인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심각한 노동시장 경직성
- 고임금
- 과도한 복지
- 복잡한 조세제도 및 규제 구조

위 항목들은 독일의 구조적 문제가 단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온 것임을 보여 준다. 그리고 통일 이후 그 규모와 차원이 훨씬 더 커진 것이다.

1990년대에 동독은 1:1의 전환비율로 독일 마르크를 얻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서독 복지시스템의 혜택을 전부 누렸다. 게다가 처음 몇 년 동안에 노동조합은 임금을 대폭 인상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동독의 생활수준(임금을 말함)은 서독의 약 90%에 이르지만, 동독의 생산성은 아직도 서독의 65% 수준에 불과하여 그 차이가 약 29%에 달한다. 예산이나 복지시스템을 통해 동독으로 이전된 비용 또한 여전히 독일 전체 GDP의 약 5% 수준이다.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전된 비용은 그 액수만이 아니라 구성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추가적인 인프라(교통, 교육, 연구 등) 개발을 위해 이전된 비용은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투자이지만, 단순히 동독사람의 현재 소득수준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비용은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부분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독일 전반에 걸쳐 사회보장시스템을 완전히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며, 또 동독만을 따로 분리하여 과거처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독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 정부는 오랫동안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부인하거나 못 본 체했다. 1990년대 하반기에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의 중도우파 정부가 일부 개혁을 시작했으나, 지금은 제2 다수당이지만 그 당시 제1 다수당이었던 중도좌파에 의해 무산되었다. 그 이후 1998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또다시 제1 다수당이 되어 독일연방정부를 인계 받은 중도좌파는 처음에 대부분의 문제들을 계속 무시하였다. 그러다가 한스 아이헬(Hans Eichel)이 재무장관으로 임명되고 나서야 중도좌파 정부는 정부지출을 삭감하고 세계개혁을 일부 단행하기 시작하기는 했지만, 올해 초까지도 개혁이 진전되는 것을 가로막았다.



그렇지만 지난 수년동안 이러한 “마음씨 좋은 태만(benign neglect)”을 비난하는 경제학자들과 평론가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금년 상반기에 약간 주저하던 연방정부가 입장을 바꾸어, 2003년 3월 게하르트 슈뢰더(Gehard Schröder) 총리가 의회연설에서 이른바 “어젠더 2010(Agenda 2010)”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혁 패키지(package)를 내놓은 것이다. 이러한 정책전환은 모종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독일경제의 미래가 위태롭다는 슈뢰더 총리와 참모진들의 인식이 분명히 바탕에 깔려있었다.

결국, 이 개혁안들 중 일부가 의회에 상정된 상태이며 금년 겨울에 최종의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세하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언급해 보겠다.

첫째,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독일에서 나타난 관대했던 직장보장성을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야 하며, 동시에 지금의 취업의욕 저하를 해소시키기 위해 실업수당 수혜 조건이 강화되어야 한다. 게다가 현재 노사 모두가 임금계약에 더 폭넓은 차별성과 유연성을 갖추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둘째, 임금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의무부담금을 축소시켜야 한다.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독일의 경우 임금 그 자체는 그리 높지 않지만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사회보장 부담금의 수준이 높아서 지난 10년 동안 노동비용이 급격히 상승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보험, 연금제도, 실업수당 등 사회보장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조치에 대해서는 상하 양원의 두 다수당에서 이미 합의중이며,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안이 곧 승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는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조세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현재 실질적인 세제개혁안이 상정된 상태이다. 이러한 종류의 개혁이 보다 중요한 이유는 독일의 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독일에 대한 투자의욕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조치로 대폭적인 세율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한편으로는 공공지출을 추가 삭감하여 적자규모를 축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상이 아직도 진행중이다.

넷째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개혁하고 정부규제를 단순화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상·하 양원은 향후 수개월 내에 새로운 절차법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정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인은 현재 진행중인 개혁과제들을 더 열거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물론, 지금으로서는 향후 수개월동안의 이러한 노력들이 어떠한 결과를 얻게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만 현 상황에서 본인이 분명하게 느끼는 한 가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처럼 강력한 개혁과제들이 현

안으로 나타난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일반 독일인들의 인식이 점점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전문가들조차도 독일경제가 다시 유럽과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엔진이 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독일이 적절한 개혁을 이루지 못할 경우 독일의 미래가 위태롭다는 인식이 나날이 더 커지고 있다.

물론 얻는 자가 있으면 잃는 자가 항상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매번 모든 사람들이 개혁에 필요한 변화를 지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많은 세월동안 처음으로, 다양한 논의를 거친 끝에 지금 독일의 분위기는 점점 더 개혁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 독일이 필요한 것은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특히 양대 정당의)이다. 현재 결정된 정책들은 향후 기본방향에 대한 윤곽과 잠재적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환경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정책결정은 정치·경제적으로 단기적인 효과를 볼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효과를 볼 것인가 하는 어려운 선택 속에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공공지출 및 사회적 이전비용 삭감은 시작단계에서 다수 국민들의 소득 및 소비수요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가 미래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증가로 보전되지 못할 경우, 단기적으로 경제에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적 지도력이 개혁과 그 개혁의 지속적인 결과에 대한 신뢰를 창출하면, 그만큼 이와 같은 힘든 전환과정을 극복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러므로 본인으로서는 독일의 정치지도자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적절한 결단을 내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본인은 개인적으로, 현재 독일에서 이른바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를 개혁하고자 하는 캠페인을 전개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독일 주요정당의 정치지도자들을 만나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은 그들 대부분이 지금 무엇이 위태로운 상황인지를 실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편, 유럽 내 주변국들도 독일의 개혁과정을 바짝 따라오고 있다. 수년 전 독일이 난관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주변국들은 아마 이를 은근히 즐기면서 지켜보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독일의 개혁성공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즉, 그들은 자국 경제발전에 대해 새롭게 번창하는 독일이 미치는 중요성을 점점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EMU와 유로의 창설로 말미암아 유럽은 “예리한 눈”을 갖게 되었으며, 단일화폐 및 단일통화체제를 가진 유로국가들은 지금 같은 배를 탔다는 것 이상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

지난 수년동안 국제사회에서 가끔 독일 금융시스템이 다소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갔거나 가고 있다는

소문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일부 평론가들은 독일의 상황을 1990년대 일본의 금융상황과 비교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일본의 부실채권 문제는 주로 1990년대 초 부동산 및 주식시장 거품붕괴의 산물이었으며, 이는 일정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그러하다.

독일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규모의 거품이 없었다. 물론 은행을 비롯한 독일의 금융기관들이 가장 최근인 금세기 초에 세계 전역에서 있었던 주식시장 거품붕괴에 의한 영향을 똑같이 받았으며 지금도 받고 있으나, 이는 1990년대에 일본 금융권이 처했던 상황과 비교할만한 차원이 못된다. 그렇지만 현재의 독일 금융권이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기는 하다.

첫째, 독일은 분명히 과잉대출 상태이며 금융비용도 높다는 점이다. 독일 금융권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점포 수를 줄이고 보다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성을 위해 노력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관계를 구성한다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독일은 아직도 민간은행, 협동조합은행, 국영저축은행이라고 하는 이른바 “3대 중심축”의 금융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들 세 그룹간의 협력은 이미 큰 진전이 있는 상태이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문제의 초점은 이 3대 그룹들이 상호간에 더욱 협력적인 관계로 개방되거나 집중화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논의가 향후 수년 내에 진전이 있을 것이며, 독일 금융시스템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게되는 과정에 있다고 상당히 확신하는 편이다.

둘째, 이와 같은 협력관계 및 집중화의 진행과 더불어 자금조달 방식도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후(戰後) 독일경제는 전통적으로 은행권 특히 민간은행들이 대기업들과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그러나, 은행권이 포트폴리오(portfolio)를 보다 유연하게 구성하는 쪽으로 관심을 두면서 이러한 관계는 점점 사라지는 추세이다.

셋째, 이러한 일이 진행되면서 3대 그룹의 은행 모두가 대출규모를 축소하고 대출조건을 변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리스크 축소 조치가 어느 정도는 “신 바젤협약(Basel II)”의 새로운 요구사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 바젤협약”의 요구사항과는 별도로 수지개선을 위해 담보대출을 더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은행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에 익숙해져 있는 독일 중소기업에게는, 담보대출 강화와 같은 변화는 거의 낯선 일이다. 하지만 독일 금융기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다른 나라의 금융권에 서는 훨씬 전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물론 이러한 모든 금융환경 변화가 독일기업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되겠지만, 본인은 이러한 개혁조치들이 금융권이나 업계에 위기를 유발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리라 믿는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끝마친 일들을 독일은 지금 하고 있을 뿐이며, 새로 발표된 독일중앙은행(Bundesbank)의 보고서에 의하면 최악의 상황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 유로지역에서는 이른바 “성장 및 안정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의 규정과 적용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독일, 프랑스 및 포르투갈이 협약 규정상으로 허용되는 규모 이상의 재정적자를 경험한 적이 있는 탓이다.

그렇다면, 우선 EMU 조약에 왜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언급해보기로 하자. EMU의 구조는 독특한 것으로, 그 역할은 단지 유로지역의 통화정책을 집중시켜온 것에 불과하다. 반면에 다른 모든 정책들(재정정책, 조세정책, 예산정책 등)은 각국 정부의 권한으로 남아 있다. EMU는 다만 각국의 정책들이 적절한지를 살피는 통상적인 감독과정을 수행할 뿐이며, 이러한 적정성 평가에 대해 각 회원국들은 EMU 조약에 기초한 세부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규정 한 가지는 모든 회원국의 재정적자가 중기적으로 “0(zero)에 가깝게” 유지되어야 하며, 해당 국가가 수년동안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이룬 경우가 아니면 매년 3%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본인의 견해로는 이 규정이 비교적 유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현재 이 조항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와 관련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논쟁을 벌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어느 한 시점의 경제적 효과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로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의 독특한 구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유로지역은 단일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단일 정부와 단일 의회도 없으며 단순히 단일 중앙은행을 가진 통화지역에 불과한 반면, 각자 고유한 재정정책을 가지고 있는 12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국가, 특히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가 방만한 재정정책을 실시한다면 이는 통상적인 통화정책(예를 들면 보편적인 국가의 통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회원국들간에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은 유로국가들은 프랑스와 독일의 재정정책이 보편성을 갖고 설정된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비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유로지역의 장기적인 미래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유럽은 유로가 과대평가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따라서 유럽은 최근의 달러약세가 그리 오래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달러화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나 재정적자가 크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G7의 두바이(Dubai) 공동성명 발표이후 특히 지금 상존하는 리스크는 달러화의 지나친 평가절하이다. 하지만 세계 전역의 경상수지를 살펴보면, 현재의 미국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상대비중은 주로 아·태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유럽은 플라자(Plaza)와 루브르(Louvre) 합의가 이루어졌던 1980년대에 비하면 비교적 소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인은 향후 수개월 동안의 환율변동 상황이 유럽이나 아시아가 앞으로 경제를 회복하는데 위험요소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 질 의 · 응 답

---

[질 문] 유로화와 유럽중앙은행(ECB)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유로시스템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특히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의 경우에는 시스템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논평했다. 귀하도 언급하였듯이 유로지역 내 일부 국가들은 특정 규정 불이행과 재정적으로 인해 분열되어 있기까지 하다. 이러한 상황이 유로화나 유로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겠는가?

둘째, 내년에 유로지역에 신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10개국(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폴란드)이 유로화 및 ECB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게 될지 본인으로서 명확하지 않다. 귀하는 이들이 통화동맹에 통합될 것으로 보는가?

[답 변]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포르투갈은 “성장 및 안정 협약”의 요구사항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EMU에 대해 예외적인 위험요소를 노출시켰다. 본인 역시 강연을 하면서 이 협약의 구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 바 있듯이, 이 협약은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는 못했다. 다만 유일하게 집중되어 부분이 통화정책이며, 재정정책은 사실상 분산된 상태이다. 하지만 마스트리히트 조약(Mastricht Treaty)에 재정정책에 대한 감독절차와 유추적용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프랑스와 독일이 향후 10년 내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이 조약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도 있다.

1960년대 초에 로버트 먼델(Robert Mundell)이 상세히 설명한 최적통화지대 이론에 의한다면 유로지역은 훌륭한 통화지대이다. 하지만 먼델이 제시한 전제조건 중 하나가 노동력의 유연성과 이동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전제조건에 의하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로지역에서는 상황이 달라지며, 심지어 전혀 아닌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이동성을 가진 노동인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소한 각국의 재정정책이 더욱 더 서로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것이다(완벽한 조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어느 한 나라의 적자규모가 커지게 되면 전체 유로지역 자본시장의 기대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역내 모든 나라들은 금리가 상승하여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규정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

독일과 프랑스 양국은 지금 이 규정에서 크게 벗어나 있으며, 규정 내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견해이다. 그렇지 않으면 통화정책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유로지역 내에서 신뢰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 만일 경제규모가 큰 나라가 재정정책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면, 이는 그 나라의 통화정책이 틀림없이 앞으로 더욱 절박하게 운영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모든 나라에게도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만일 한국도 통화정책만 집중되어 있고 여타 정책은 분산되어 있는 그룹의 일원이라면, 규정을 준수하는 일이 중요하다. 본인은 일부 정치인들이 이에 대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그것은 문제가 된다.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된다.

유로지역 신규회원국과 관련하여, 이미 유로회원국에 가입할 권리가 있는 세 나라(영국, 덴마크, 스웨덴)의 가입여부는 그들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스웨덴은 유로회원국 가입을 거부했으며, 영국은 항상 가입하겠노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부, 의회, 국민에 의한 가입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세 나라 중 유로회원국으로 가입할 나라는 현재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중·동부유럽 국가의 신규회원 가입문제이다. 그 지역 국가들이 실제로 내년에 EU회원국이 될 경우, 해당 국가의 조건이 가입기준에 부합되지만 한다면 관련 조약에 따라 그 국가는 유로회원국이 될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조약에 의하면, 해당 국가가 유로화를 사용하기에 적절한 상황이 되기까지 최소한 2년간의 경과기간을 반드시 두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그 국가들이 실제로 내년에 EU회원국이 된다하더라도 2006년이나 2007년 초까지는 유로회원국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때 가서 어느 나라가 유로회원국이 될지는 본인도 알 수 없는 사항이다. 3개월전만 해도 그들은 최대한 빨리 유로회원국이 되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쏟았지만, 지금은 다른 언급도 나오고 있다. 현재 그들은 약간 머뭇거리면서 유로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기다리면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그들은 자국이 실제로 그렇게 빨리 유로회원국에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다. 결국,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은 중·동부유럽 국가의 유로회원국 가입은 아무리 빨라야 2007년에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뿐이다.

[질문]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한간에 사용될 환율이나 표준 등 귀하께서 한국에 해줄 조언이 있다면? 둘째로,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본 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이며, 아시아는 이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겠는가?

[답변] 한반도 통일은 큰 이슈이다. 본인이 한 가지만 말한다면 독일의 경우는 실수를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의 경우 본인은 한국이 독일보다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기를 바란다.

사실 베를린 장벽 붕괴와 유럽 내 국경개방은 단순히 독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변화의 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독일은 각기 다른 두 가지 체제를 하나의 국경 내에 둔다는 점만 반영했다. 독일 통일은 멈추거나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인 변화의 전개과정 속에서 독일은 통일에 대해 많은 압력을 받고 있었다. 만약 한국이 통일과정에 있다면, 지금의 상황은 1989년에 독일이 처했던 상황과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던 각기 다른 두 가지 체제에 대한 문제가 더 이상 없다. 한국은 서구체제에 속해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지금 어떠한가? 북한의 뒤를 봐주는 큰 제국이 있는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독일 통일 과정의 걸림돌이 되었던 동독 주민 유입과 같은 것을 피하기 위한 전환기간일 뿐이며, 이러한 것이 전환에 필요한 기간을 조금 더 연장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독일의 경우 가능한 빠른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 놓고 있었다. 이는 동독이 국경을 개방할 경우 서독은 이를 저지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또한 앞으로 독일 통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인식하지 못했다. 서독은 아주 단기간 내에 통일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고르바초프의 후임이 누가 될 것인지 구소련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이 빨리 이루어지게끔 압력을 받았던 것이다.

1990년대 초 급박하게 이루어진 선거에서 동독 사람들은 통일을 택했다. 하지만 많은 서독 정당의 선거운동원들이 동독으로 가서 전반적인 활동을 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선거운동에서 독일 마르크화의 전환비율을 1:1이 될 것이며, 서독의 복지환경이 동독으로 이전되고, 또 동독 주민들의 소득이 곧 서독 수준이 될 것이라는 공약을 했다. 그 이후 이러한 정책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적절한 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더 어려웠다. 그래서 본인은 한국이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이와 같은 독일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 환율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평가도 가끔 있기는 한데 이는 경우가 전혀 다르다. 환율은 단지 한 가지 요인에 불과할 뿐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전된 임금계약이었다. 이 계약이 대폭적인 임금상승을 가져왔으며, 이와 함께 서독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것도 많은 문제를 낳았다. 전체 시스템의 이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 한번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것이 문제였으며,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이와 같은 독일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최초의 사례가 아니라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질 문] EU 설립에 대한 귀하의 견해와 아·태지역 국가들이 이와 유사한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유럽의 경우, 현재의 유럽연합 형태를 갖추는 데에 1960년대부터 1999년까지 30년 이상 걸렸다. 본인은 아·태지역에 그와 같은 자유무역지대나 역내시장, 제도적인 기본체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에 유럽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만 언급하겠다.

우선,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느 한 나라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 않아야 한다. 유럽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상황 때문에 전체적인 통합과정이 훨씬 더 쉽게 이루어졌다. 그 당시 독일은 국력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힘을 잃어 지배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독일과 특히 프랑스의 정치인들은 공동번영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로버트 슈만(Robert Schuman)과 콘라트 아데나워(Konrad Adenauer)에 의해 사실상 최초의 공동체가 설립되었다. 그 후, 회원국이 확대되고 협력과 통합이 진행되면서 이 공동체는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었던 것이다.

[질 문] 귀하는 독일과 유럽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결론을 내렸는데, 인기 위주의 정책이 시행되거나 이러한 방향의 제도적 인프라가 자리를 잡게 되면 이를 되돌려 놓기가 매우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라는 본인의 생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모든 부분에서 한반도 통일에 필요한 전환과정이 매우 길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점은 한국인들에게 크게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인은 개인적으로 한국이 앞서 언급된 인기 위주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 한국이 일정기간 이러한 방향으로 가다보면,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점들을 인식했을 때 이에 대한 정책전환이 몹시 어려워질 것이다.

[답 변] 본인도 동의하는 바이다. 정치개혁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과정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개혁을 너무 오랫동안 미루어왔다. 독일은 너무 늦게 개혁을 시작한 것이다. 현재 독일의 경우 진정한 문제는 이러한 개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또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신뢰창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독일은 지금 개혁을 위해 노력중이며, 본인은 이러한 노력에 대해 본인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았었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독일이 오늘날까지 오면서 높은 수준의 GDP와 고소득을 계속 유지해왔다는 사실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는 미래를 위한 가능성들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래를 위한 기회 창출이다. (끝)



---

## Europe and Germany in Transition: Where Will the Economies Go?\*

Hans Tietmeyer

The most recent “World Economic Outlook” published by the IMF in September presented the conclusion that, “Global GDP growth is expected to remain about 3% in 2003, rising to 4% in 2004.” It added, however, the caveat that, “While the balance of risks has improved since last April, it remains slanted to the downside.” Besides uncertainties about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dollar exchange rate and oil prices, it mentioned in this context again the negative aftereffects of the extraordinary equity bubble of the late 1990s. This global picture, however, covers very diverging assessments for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economy.

Asia Pacific in particular is, again, set to be the fastest growing region this year, and its growth is even expected to pick up further in 2004. For Japan, however, further growth is expected to be low, and additional measures to accelerate restructuring and to end deflation are seen as necessary.

Also in the next year, the main engine of global growth will very likely be the US economy, even if some of its growth until now has seemed to be based on special and probably not lasting incentives. For example, this is true in the case of special tax benefits, the special wealth effect for many consumers resulting from the combination of higher house prices and lower interest rates, and for the extreme increase in military expenditures which cannot go on for long. But despite these risks, the US economy is expected, once again, to be the main driving force in the world economy in 2004.

If this happens, all the other parts of the world economy will, at least in the short run, benefit from its strength. Besides Latin America and Asia, Europe in particular urgently needs this growth of, and trade with, the biggest and most developed economy in the world next year.

Europe is today clearly not in a position to play the role of a strong driving force in the world economy. Already, over the past two decades, its growth rates have been slightly

---

\* This is a transcription of a speech given at the Distinguished Lecture Forum on November 4, 2003.

lower than those in the US, and clearly lower than those in Asia Pacific. This gap has become even bigger over the past few years. Causes for the present low growth and relatively high unemployment are many-fold and many-sided.

Today, however, Europe can clearly not be measured as only one economy. Despite the establishment of a common market with, at present, 15 member countries, and despite the even broader free trade area, there are still big differences in the economic structure and performance. These differences are, on the one side, related to their level of development, and on the other to the longer run differences in their economic policies.

For example, most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or, as they are often called, “countries in transition”, are now growing much faster than most western European countries. They are trying to catch up. This is especially true for the ten countries which will join the European Union next year, to increase this union to 25 members.

In addition to this, the present 15 members of the union are split into two groups: the so-called euro group of 12 countries that share one currency and one monetary policy (Austria, Belgium,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reland, Italy, Luxembourg, the Netherlands, Portugal, and Spain); and the three countries that, until now, have stayed outside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 (Britain, Denmark, and Sweden). Whether and when these last three will join the euro group is still an open question. Looking at their growth and employment figures over the past few years, and forecasts for next year, these three countries have done, and will likely do, at least in the near future, to some extent better than the euro group. One should, however, be cautious in attributing this better performance to their non-membership of the monetary union.

Even inside the euro group there were, and are, clear differences in last year's growth and employment figures. While catching up countries like Spain, Portugal, Ireland, Finland and the Benelux countries have done better, the three bigger continental economies of Germany, France and Italy have faced over the past few years low, or even no, growth, while at the same time increasing unemployment. These three economies, though, cover close to 70% of the whole euro group GDP.

**T**he present 12 euro economies share just over 15% of world GDP and just over 30% of world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Today they are clearly behind the US, and yet constitute the second biggest economic and monetary area in the world. This second biggest area

---

has, over the past two years, shown some of the lowest growth rates in the world, less than 1%. Low-side forecasts for next year see this area growing only by 1.9%.

These bad results and forecasts raise questions, of course. Why is the euro group as a whole, and especially the bigger economies within this group, not doing better? The answer is not as simple as some Anglo-Saxon analysts and commentators have sometimes argued. They sometimes criticize the monetary and even fiscal policies in the euro area, saying they are not sufficiently growth-oriented. They would like to see even lower nominal interest rates, lower than the present 2%, and at the same time an even more expansive fiscal policy.

In my view, such policies would likely be counterproductive. The weakness of growth in the euro area is neither solely cyclical, nor the result of a too-restrictive monetary and fiscal policy. The real causes for slow growth and growing unemployment, especially in the bigger euro economies, are much more deep-rooted. They are mainly of a structural nature and can only be addressed by appropriate structural policy decisions. Only convincing efforts to correct and to improve the framework of the too-heavy public burdens and the too-rigid regulations can, and will, improve the prospective for future oriented decisions. These corrections will take great political courage and time.

In these countries, such short-term-oriented monetary and fiscal stimulation could even be counter productive because of its negative effect on confidence in the future political framework. Such policies could easily undermine trust in the new currency and could increase the already too-high public debt in these countries toward unbearable dimensions. These economies need convincing policies that really address the accumulated structural problems and shortfalls.

During the past decade some of the main structural problems in some countries had already become more and more visible. During the 1990s, most EU countries were able to improve their macroeconomic stability, but at the same time some failed to deliver satisfactory growth or employment. This underperformance was striking. It contrasted not only with earlier expectations based on the so-called Single Market Program of the EU initiated in the second half of the 1980s, but also contrasted with the past performance and recent accomplishments of the US.

The reasons for the present underperformance of such highly developed countries as Germany, France and Italy are to some extent, of course, different. But at the same time, these three have much in common. Their labor markets are more rigid than in most other countries. This is due to

---

official regulations and not enough flexible wage developments. Their public welfare systems are so expanded that they cannot be appropriately financed. Very often they are giving the beneficiaries the wrong incentives.

Without fundamental change, big parts of these welfare systems will not be able to be financed any longer, especially because these countries will face growing changes in their demographic development. They must either fundamentally reform their public welfare systems, or else increase public debt, or else raise contributions and taxes.

**S**ometimes from within and without Europe alike, one hears that these fiscal and labor market problems were caus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monetary union in 1999. In my view, this argument is not correct. It is true, though, that the monetary union, with the creation of one currency and a single monetary policy by the European Central Bank (ECB) for all participating countries, has made all the already accumulated structural problem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countries more transparent, and has strongly increased the competition inside this union.

For more than four years now, all investors have been faced with the same monetary conditions, without any exchange rate risk between the participating 12 countries. Now, though, all the other competitive factors—like regulations, taxes and labor costs—are playing a much more important role inside the euro area. They are no longer compensated for with different monetary conditions or possible changes in the national exchange rate.

Germany in particular has been effected by this new dimension of competition. As long as it had the *deutsche mark* (DM) as a national currency, with its high international reputation, German interest rates were normally lower than those in most other European countries. But today, nominal interest rates are the same in all euro countries because of the single monetary policy. Real interest rates are now even higher in Germany than in most other euro countries because of the relatively lower inflation rate.

This new competitive dimension inside the euro area has created not only new opportunities, but also new challenges, especially for countries with highly developed public welfare systems and social protection, like Germany. Mentioning this does not in any way take away from the benefits produced by the monetary union. Inside the euro area there are now fewer exchange costs and risks, and consumers can now use their own currency in most European countries. But on the

---

other side, there is also much stronger competition. A single monetary policy means that one interest rate must fit all member countries.

**I**t took a long time to create the monetary union that is now found in Europe. Personally, I have been involved in this process since the 1970s. I was part of a special group of experts who, for the first time, outlined a plan to create 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 in Europe. Only after some 30 years, with a long time for preparation and some very serious European currency crises, it was agreed to start with such a union.

From the very beginning, this EMU was seen by some commentators as being, “An Awfully Big Adventure” (*The Economist*, April 11, 1998). They spoke of taking a very risky step. Some of them at that time, for example Milton Freedman and Martin Feldstein, even predicted that there would be a short-term collapse. In the meantime, most of their forecasts were more cautious. I did not share, and to this day do not share, their pessimistic view. But in public hearings across Europe, I have still many times had to underline the new dimension of competition inside a monetary union, and emphasize the need for more flexibility, especially in the German economy.

Looking back on more than four years of EMU in Europe, my personal assessment is that the monetary union itself has been an overall success for Europe. Internal monetary stability has been maintained and even improved in the euro area. Previous exchange rate risks inside the euro area have been totally abolished, and so hedging costs have been reduced. Consumers have especially gained from stronger competition and better transparency of prices in their neighboring countries.

Some economies have clearly gained more than others. Countries that in previous times were faced with devaluation risk, and therefore had to live with higher internal interest rates, can now enjoy the same low interest rates as the previous hard core countries like Germany and the Netherlands. Because of higher inflation rates in some catching up countries, these economies have experienced in the early years even *lower* real interest rates. But these “benefits”, if they are such, are transitional and will be more and more eroded as we move forward.

A much more important factor are the differences in flexibility and structural rigidity among participating countries. Such factors now play a growing, important role. It becomes clearer day by day that the monetary union now exerts more and more pressure for necessary structural reforms, in particular in the already mentioned three bigger countries on the European continent: Germany, France and Italy.

---

At present, we see happening what *The Economist* predicted at the end of the already mentioned article in 1998. “The big potential for the EMU... [is that] it will bring pressure to bear on Europe to tackle long overdue structural reforms. These may cause social tensions, even a backlash of public opinion against the EU and the single currency. But the reforms have to come anyway, euro or no euro; things that are inevitable tend one day to happen. The Awfully Big Adventure is likely to make them happen faster, so on that basis it should be good for Europe.” I cannot do more than agree, once again, with this conclusion, which I had already been underlining before it was presented by *The Economist*.

In the meantime, the European Union has finally realized how important it is that all European economies become more flexible and competitive. Last year, th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agreed on a so-called “Lisbon Agenda”. It set the goal that European economies should become as dynamic, flexible and innovative as the US economy within ten years.

But until now, such statements are only general programs. I doubt whether such EU statements and wordings can really bring Europe forward. What Europe needs are convincing structural reforms at the national level, particularly in the bigger member countries. Such reforms can, and will, of course also bring improvements for the euro area and for Europe as a whole.

**T**he German economy is by far the biggest in the euro area. It constitutes close to one third of the area’s GDP. But unlike previous times, for the past three years this economy has seen the lowest growth rates in Europe. Likely growth this year might only be close to 0%. Most forecasts for next year see German growth within the 1.5% to 2% range. That is on the low side of predictions for European economies.

This shows that the “European champion” of the past is now in a difficult transitional process. On the one hand, this economy is still one of the strongest producers and exporters of highly developed industrial products and machinery equipment. Its external balance is, after a few years immediately following unification, again in surplus. But on the other hand, for some years now there has been a lack of new dynamism, a lack of new investment, and even a lack of consumer demand. Overall growth over the past few years has been particularly low and the already high unemployment from before has grown to new records.

The obvious present weakness of the German economy should not, however, be misunderstood. It neither indicates that Germany has lost its former capabilities and resources, nor does it signal a

---

loss of its “championship status” in Europe forever. Anyone making a comparison with the development of the Japanese economy in the 1990s should not forget that Germany did not experience a similarly sized real estate and equity bubble, as Japan did at the end of the 1980s.

The causes for the present weakness in Germany can be mainly attributed to the following factors:

- high rigidity in the labor market
- high labor costs
- an expansive welfare state
- a complicated tax and regulatory structure.

This list shows that these structural problems are mainly *not* the result of short-term developments. They have accumulated and developed over a long time. After German unification, though, their size and dimension became much bigger.

In 1990, East Germany not only got the *deutsche mark* at a conversion rate of 1:1 and the full benefits of the West's welfare state system. In addition, the trade unions pressed for a strong increase in wages during the first few years. Because of this, East Germany's living standard today—that is, wages—is close to 90% of the West's level. However, productivity in the East is still today only around 65% of the West's. This is a gap of almost 25%. Transfers made to East Germany through budgets and the public welfare system still today amount to close to 5% of the entire German GDP.

The problem with these West-to-East transfers is not only its amount, but also its composition. Transfers toward further developments in infrastructure (i.e., traffic, education, research, etc.) are productive investments in the future. However, transfers that simply subsidize the people's present income level are much less productive. It is precisely for that reason that it is of crucial importance to correct the entire social system across all of Germany, since clearly it cannot be done separately in only what was East Germany.

**F**or a long time, governments in Germany denied or overlooked these structural problem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the center right government under Chancellor Helmut Kohl started some reforms. They were, however, blocked in the second chamber by the then-ruling center left majority. Since then, this party has gone on to win the election of 1998, and also a majority in the first chamber of parliament. After taking over the federal government, they at first

---

continued to neglect most of the problems. It has only been since the new finance minister, Hans Eichel, took office that they have started to cut expenditures in the federal budget and to introduce some tax reforms. But until the beginning of this year, the center left majority blocked further reforms.

Over the past few years, however, more and more economists and commentators have begun to strongly criticize this attitude of “benign neglect”. But after some hesitation in the first half this year, the federal government changed its position. In March 2003, Chancellor Gerhard Schröder addressed parliament and presented a new reform package, the so-called “Agenda 2010”. This policy turn was clearly based on his and his colleagues' perception that, without some fundamental reforms, the future of Germany's economy is at stake.

Finally, some of these reforms have gotten onto parliament's agenda, and it will make a final decision this winter. Without going into details, I will mention only some of the most important points.

First, to reduce the labor market rigidities, the up-until-now very generous job protection found in Germany will be substantially reduced. At the same time, preconditions for unemployment benefits will be strengthened in order to reduce the present disincentives to accept a job. In addition, unions and entrepreneurs are being pressed to introduce more differentiation and flexibility in their wage contracts.

Second, to stop and to reverse the increase in labor costs, the required contributions into the social system should be reduced. This is all the more important because in Germany it is not so much the wages themselves, but these additional contributions that must be paid by the employer that have pushed up labor costs so steeply in the past decade. Therefore, in order to continue providing its services, the health care system, the pension system, and the unemployment benefits system must be fundamentally reformed. First steps are already being agreed upon by the two different majorities in both parliaments. It is to be hoped that fundamental and lasting reform will be soon approved.

Third, to simplify the system and to reduce the tax burden, there are now fundamental tax reforms on the table. Reforms of this nature are all the more important because the German system is so complicated; investors are often *de*-motivated to invest in Germany. The first step next year will very likely be a substantial reduction in tax rates. Negotiations are still going on, though,

---



because the big budget deficits have to be reduced at the same time by even more cuts in public expenditures.

Fourth, to reform the political decision making process and to simplify official regulations, both houses of parliament have agreed to elaborate new procedures over the next few months. The aim is to establish more clear-cut lines of responsibility at the federal and the state levels.

I could go on listing the reforms that are now under way. Of course, at this moment, nobody can predict the real outcome of these efforts over the next few weeks.

One thing seems clear to me at this time. Over the past few decades, I have never seen such a strong reform package on the table. Even more importantly, according to public opinion polls the average German on the street now realizes more and more the need for fundamental reform. Besides just the experts, even *they* now realize that the German economy needs substantial reform in order to once again become a driving engine of the European and world economies. Day by day, they realize that their own future is at stake if Germany does not undertake appropriate reform.

Of course, one cannot expect all people at all times to support the necessary changes; there are always winners and losers. But for the first time in many years, after many controversial debates, the mood in the country seems to now be moving more and more toward being in favor of reforms.

**W**hat we now need in Germany is strong political leadership, especially in both big parties. Policy decisions made today must be clearly explained, and outline the future framework and environment for any potential investor.

Decisions on fundamental reforms must balance a difficult tradeoff between short-term and long-term economic and political effects. Cutting public expenditures and social transfers can produce, for a lot of people in the first round, lower income and lower consumption demand. This can have a short run negative effect on the economy if it is not compensated with more investment, which in turn must be based on confidence in the future.

However, the more the political leadership can create confidence in the reforms and their lasting results, the more we can bridge this difficult transition process. It is to be hoped that our political

---

leaders will understand this problem and will decide appropriately.

In Germany now, I am personally running a public campaign to reform our so-called “social market” system. In this context, I meet with political leaders from all the big political parties. From these conversations, I get the impression that most of them now really understand what is at stake.

At the same time, our European neighbors now closely follow the German reform process. Some years ago, they perhaps looked on with some malicious joy (*Schadenfreude*) at the beginning of difficulties in Germany. But today they are very much interested in successful German reform. They realize more and more the importance of a newly growing and prosperous German economy for their own economic development.

In particular, the move into the EMU and the creation of the euro have “sharpened eyes” in Europe. Euro countries now realize more than ever that with the single currency and the single monetary policy, they now sit in one boat.

Over the past few years, it has been sometimes possible to hear or read in international circles the rumor that the German banking system was, or is, somehow on its way toward a fundamental crisis. Some commentators even compared developments in Germany with the banking problems of Japan in the 1990s.

In my view, though, this comparison is clearly wrong. The bad loan problem in Japan was, and still is to some extent, mainly the consequence of the big bubble in real estate and equities which burst in the early 1990s.

In Germany, we did not have a bubble of such magnitude. Of course, the German financial institutions (not only the banks) were and are affected equally by the most recent worldwide equities bubble and its bursting at the beginning of this century. But the dimensions are not comparable with what the Japanese banks faced in the 1990s. German banks are at present faced with some other problems, though.

First, Germany is clearly over-banked and the costs of banking are too high. German banks have realized this. They are trying, now, to reduce their number of branches and to organize more cooperation. To develop such cooperation, though, is not always easy. Germany still has a so-

---

called “three pillar” banking system. There are private banks, cooperative banks, and publicly-owned savings banks. Cooperation within these groups has already made big progress. But now discussions focus on the question of whether these pillar groups should not be opened to more cooperation, or even concentration, between the groups. I am pretty convinced that these processes will make progress over the next few years, and that the German banking system is on its way toward becoming more internationally competitive.

Secondly, besides this cooperation and concentration process, there has also been under way a change in financing methods. According to postwar German economic tradition, the banks, and especially the private banks, were very often stakeholders in the big industrial companies. These links are disappearing more and more, as the banks are interested in having a much more flexible portfolio.

Third, as this is going on, all three types of bank are trying to reduce their direct credits, or else to change the conditions. To some extent, this risk reduction is the consequence of the newly expected “Basel II” rules. But even independent from the “Basel II” rules, German banks are trying more and more to securitize their credits to clear up their own balance sheets. This change toward more securitization is often new, especially for medium sized enterprises that, in Germany, have been accustomed for a long time to financing their activities via direct credit. Only now are German financial institutions changing, whereas other countries' banks have done so much earlier.

Of course, all these financial changes pose new challenges to German business. But I am convinced that these reforms can, and will, be undertaken without creating a crisis, either for the banks or for the business community. Germany is only now doing what other economies have already done. And according to a new report by the Bundesbank, the worst seems to be already over.

**T**here is a controversial debate going on now inside the euro area about the rules and application of the so-called “Stability and Growth Pact”. For some time now, Germany, France and Portugal have all been seeing budget deficits bigger than the pact rules allow.

Let me first comment on why there are such rules in the EMU treaty. The construction of the EMU is unique. It has only centralized the *monetary* policy of the euro area countries. All other policies—including fiscal policy, tax policy, budget policy, etc.—are still in the hands of national,

---

domestic authorities. The EMU carries merely a common surveillance procedure to see whether national policies are appropriate. For this assessment of appropriateness, the partner countries have laid down some rules that are outlined in the treaty.

The single most important rule is that the public deficits of any one participating country should, over the medium-term, be “close to zero”, and that they should not go beyond 3% in any one year, except in years of lasting negative growth in the relevant country's economy. This, in my view, is a relatively flexible rule, but it is now being criticized as being too rigid.

From a purely economic point of view, one can, of course, dispute in this context any exact figure. As you know, economic effects at any one time depend on many other impacts. One should, however, not overlook the unique construction of this new currency area.

This economic area has no single state. There is no single parliament with one government. There is simply a currency area with one central bank. But at the same time, there are also 12 national states with their own fiscal policies. If a country, particularly a bigger one, follows a lax fiscal policy, it can harm the common monetary policy (i.e., the common economic area's currency) and can create tensions among participating countries.

The smaller euro countries have begun criticizing France and Germany for not following a national fiscal policy in line with the commonly established rules. I can fully understand these critics. I hope both countries will, in due time, come back toward the agreed rules. This will be very important for the long-term future of the euro. On the other side, however, Europe is not interested in having an overvalued euro either. So we hope very much that the present weakening of the dollar will not go too far.

The US dollar does have some weak points, like the big current account deficit and the present budget deficits.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G7 statement in Dubai, there is especially a risk of a too-strong devaluation of the dollar. But looking at current accounts across the globe, the main counterweight to the US deficit today is the supplies in Asia Pacific. Europe has only a relatively small current account surplus, in contrast to the situation in the 1980s when we organized the Plaza and Louvre agreements.

Be that as it may, I very much hope that the development of the exchange rates over the coming few months will not endanger the expected economic recovery, either in Europe or in Asia. Thank

---

---

you very much.

---

## Questions & Answers

---

**Q** I would like to ask your opinion about the euro and the ECB. First, there are a lot of comments, particularly in *The Economist*, that say the system is under strain. As you noted, some countries are even breaking particular targets and are in fiscal deficit. This could endanger the euro and the whole system. Do you agree?

Secondly, it's not clear to me how the ten new members who are supposed to join next year will relate to the euro and the ECB (Cyprus, the Czech Republic, Estonia, Hungary, Latvia, Lithuania, Malta, Slovakia, Slovenia, and Poland). Do you see them integrating into the monetary union?

**A** The two big countries', plus Portugal's, failure to meet the demands of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poses a special risk to the union. During my speech, I tried to elaborate on the construction of the treaty. It does not centralize all policy making in one place. It only centralizes the *monetary* policy, and in fact *decentralizes* fiscal policies. With the Maastricht Treaty, we established a procedure to supervise and to perform surveillance. We established reference points for fiscal policies. Over the next year, if France and Germany continue to fail to meet their Maastricht targets, it could really undermine the treaty.

If we were to follow Robert Mundell's plan for an optimum currency zone, which he elaborated in the early 1960s, the euro area would be fine. However, one of his pre-conditions was that there be enough flexibility and mobility of labor. This is absolutely not the case, and to some extent will never be the case, in the euro area with its different languages and different cultures. Only *part* of the population will ever be truly mobile.

Because of this, there needs to be more harmonization—I'm not saying complete harmonization, but more harmonization—at least between fiscal policies. If one country moves toward a big deficit, it can to some extent undermine the capital market's expectations for the whole euro area. In the long run, it will clearly make interest rates higher for all. All will then suffer the disadvantages. That is why we need some rules, and the rules have to be applied.

---

Two countries—Germany and France—are now moving strongly away from these rules. In my view, they must come back. If they do not, it could undermine confidence in the euro because conflict with monetary policy could come up. If the big countries follow a lax fiscal policy, it could mean that *because* of that the monetary policy has to be more stringent in the future. That would harm all the others.

If you live as part of a group of countries where only the monetary policy is centralized, but where other policies are decentralized, it is important to follow the rules. I am very disappointed with the conversations that are going on between some politicians when they say, “It doesn’t matter.” It *does* matter. Not probably today, but in the future.

As far as the new members are concerned, the three countries that already have a right to come into the euro area (Britain, Denmark and Sweden) must decide by themselves. For the time being, I do not expect them to do so. Sweden just rejected the euro. The British government has always indicated it would come, but it has said the decision should be taken by the government, the parliament and the people. For the time being, I don’t expect any of them to come in.

The other point is the new member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If they actually join the European Union next year, according to the treaty they have the right to become members of the euro group only when they meet the entry criteria. In the treaty, though, it is clarified that at least two years must elapse before they are eligible to use the euro. So if they really become EU members next year, they cannot become members of the monetary union until 2006 or 2007 at the earliest.

I don’t know which of the ten new countries will then become members of the euro. Three months ago, most of them were very much interested in moving in as early as possible. But today you also hear other noises. They are a little more reluctant and want to wait to see the outcome of the euro. They are not sure whether they should really join at the first moment possible. I cannot predict any more than to say that the earliest will not arrive until at least 2007.

**Q** In the case of Korean unification, could you perhaps suggest what kind of benchmark or exchange rate we should use between the North Korean and Korean wons? Secondly, do you have any thoughts about Asian monetary integration and, based on your European

---

experience, how do you suggest we approach such a union?

**A** Korean unification is a big issue. Let me only say that we, in Germany, made mistakes. I hope that in the case of Korean unification you will have more time than we had.

The fall of the Berlin Wall and the opening of the borderline in Europe was really a change of worldwide proportions, not merely of German proportions. Germany merely reflected the overcoming of the borderline by one of the two systems. It could not have been stopped or slowed down. In the context of these worldwide developments, German unification was under a lot of pressure.

I have the impression that if Korean unification were to come, it would not be the same today as it was for us in 1989. Here, this is not a question anymore of two worldwide systems. South Korea is part of the Western system, but what is North Korea doing? Do they have a big empire behind them? I don't think so. Korea simply needs a transitional period in order to avoid the rush that hampered the German unification process. That would give a little more time for the transition.

Secondly, in Germany we had an established policy to come to unification as early as possible. That means that when the borderline was opened from the eastern side, the West could not stop it. Nobody was aware, either, whether there would be a unification in the future. The West was interested in unifying in a very short time. But nobody knew who would be the next Gorbachev, or what the situation would be like in the Soviet Union. There was pressure to unify quickly.

There was a quick election campaign in early 1990, and the people of East Germany voted in favor of unification. It should be noted, though, that a lot of West German party campaigners went to East Germany and ran the whole campaign there. That means they promised a lot of things. They promised a *deutsche mark* conversion rate of 1:1, they promised that the welfare state would be transferred, and they promised that the people of East Germany would soon be at the income levels of the West. Since then, these policies have created a lot of problems. But at that time it was much more difficult to decide on proper policies. So I just hope the Koreans will have more time and will be able to learn from this experience.

---

Also, though it is often said that the exchange rate was the crucial factor, this is not entirely the case. The exchange rate was only one factor. The most important point was the wage contracts transferred to the East from the West. They brought a strong wage increase. Similarly there were problem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West's social security system. It was a one-off transfer of the entire system. It was not done in steps. That was, and is, the problem. Korea can learn from these German failures. It has the privilege of not being the first.

**Q** You mentioned that there are some European economies that are a bit stagnant these days. Also, can you provide some quick comments on building the EU, and how countries here in Asia Pacific can overcome any similar difficulties?

**A** In Europe, it took from the 1960s to 1999—more than 30 years—to form the present European Union. I don't know if there is any likelihood of building such free trade areas, internal markets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in Asia Pacific. I can only refer to the developments in Europe.

In terms of structure, there should not be one, single dominating country. In Europe, the entire integration process was made very much easier because of the German situation after World War II. Germany came in from down on the ground. It had to start again. It was not a dominant power. It was a defeated power. In Germany, and especially in France, politicians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better to grow together. It was Robert Shuman and Konrad Adenauer who really established the first community. After that, it was subsequently developed by enlarging the membership and by developing the cooperation and integration.

**Q** You ended on an optimistic note about the German and EU economies. But in my view, once populist policies are implemented and the populist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is in place,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undo it. It will take a long, long time to reverse it.

In that regard, there is all probability that a transitional period during Korean unification would be too long. This should be very much emphasized for Koreans. I am personally very much concerned that we are moving toward that direction. Once we go that direction for some time, it will be very difficult for us to reverse the policy when we realize all the problems.

---



**A** I agree. Policy reforms are difficult. But the entire process is the point. We in Germany postponed real reforms for much too long. We started late. The real question now in our country is to do it properly, and to do it in a confidence-creating manner that will bring confidence to investors. Germany is trying to reform. I hope very much, though, that I was not too optimistic. But at any rate, one should not underestimate the fact that, up through to today, Germany retains its high GDP and its high income. That is not at stake. What is at stake, are the possibilities for the future. We have to do the job now to create the opportunities for the future.

---

---

##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 후원회원의 종류 : 법인회원, 개인회원

---

  - 법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연구원 주최 행사에 우선 초청  
연구원 주최 행사에 5인까지 무료 참가 가능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 무료 제공  
법인 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 개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연구원 주최 행사에 초청  
행사 참가비 할인  
연구원이 발간하는 일부 간행물 무료 제공

---

  - 후원회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공제 가능

---

  - 회원 가입 문의  
551-3334~7(전화) 551-3339(팩스)  
E-mail : igenet@igenet.com  
<http://www.igenet.com>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  
E-mail : igenet@igenet.com  
<http://www.igenet.com>